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영희(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향후 WTO 개도국 주장 안 해”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의결... 사실상 포기 선언 홍남기 “韓 경제 위상 볼 때 인정받기 어려워 농민들 요구는 눈·귀 열고 적극 검토할 것”

정부가 “향후 관련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대외 위상을 고려한 결정이다. WTO 164개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 협의회(G20)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9곳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이런 경제적 위상을 볼 때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한국과 경제 규모·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브라질·대만 등 다수의 나라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시작 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협상에 한해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의사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현재·미래 WTO 농업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미래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영향이 없으며 이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의)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서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 개도국 특혜는 지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과거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APTA) 등과도 관련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 아래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쌀 등 국내 농업 민감 분야 최대한 보호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

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직불금 관련 금액을 8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을 담았다.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늘리는 등 보험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후계농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최대 3년 동안 월 8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은행 제도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번에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향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늘 결정으로 농업계의 반발이 클 텐데 어떻게 협의하겠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는 “농민들이 요구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관심이 큰 것이 공익형 직불제다.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도입된다는 전제 아래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텐데 정부는 국회 심의에 성의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

권익위 “한겨레 고소한 윤석열, 이해충돌 위반 소지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석열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다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확인·점검에 관한 현행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과

추후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검에서 이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

인턴사를 고소한 윤 총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에 따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받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5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즉 윤 총장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과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고소 건으로 인해 자신과 해당 수사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성립했으니, 고소 사건과 관련된 수사 업무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즉시 배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업무수행과 검찰이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 사이에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총장의 한겨레 고소 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사례와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기관장의 위반 사례가 확인 돼도 징계를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조 전 장관이 ‘셀프 징계’를 할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셀프 징계’가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관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뉴스

靑 “한일 총리 회담, 대화 물꼬 텃다... 정상회담은 아직”

청와대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 이 총리가 일본에 가서 대화의 물꼬를 텃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돌파구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고 (회담 성과가) 그 정도 수준에 맞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2시간 가까이 등 양국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 경색을 방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일관계는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하며 양국 협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전향적 조치는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간 만남은 아직 쉽지 않다”며 “실무적 차원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채널 등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

국회 예산정책처, 오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늘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 심사를 앞두고 주요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인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축사를 한다. 사회는 신울 명지대 교수가 맡았다.

인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김일권 예산정책처 예

산분석실장의 분석 내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예결위 간사를 맡은 민주당 전혜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 당의 입장과 심사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전문가 패널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화제의 논의를 전할 계획이다. /뉴스

興 싱크탱크 “日 식민통치 옹호, 특별법으로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25일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들의 행위는 학술활동을 넘어 정치적 선동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독도의 날’을 맞아 발간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극에 달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를 막을 특별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학술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대중선동 민연 ▲국내활동을 넘어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한 반국가·반인도적 행위 ▲많은 국민들은 일제 식민통치 옹호 등의 극단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뉴스

청정원 classic

순창

좋은 생각 고추장!

축! 전주매일 창간

청정원 classic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청정원 순창 찰고추장은

- 태양초 100% | 고추장내 고춧가루 11.3% 중
- 현미 100% | 고추장내 현미 20.4% 중
- 천일염 100% | 고추장내 천일염 6.8% 중